

진상규명 실패...단죄는 흐지부지

5·18 기억투쟁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도'로 내몰았던 5·18민주화운동은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5·18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계엄군을 앞세운 신군부가 저지른 만행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반면 민주정의당(민정당·현자유한국당)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당시 군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과잉 시위를 탓하며 신군부가 내세웠던 '자위권 행사'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교착상태에 빠진 광주청문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진상조사 보고서 하나 없이 끝을 맺어야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5·18은 39년이 되는 지금까지 발표 명령 책임자와 압매장 등의 핵심 쟁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의 진실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18특별법이 마련되고, 검찰의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면서 드러나는 듯했다.

검찰은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와 계엄군의 지휘 체계 등을 확인하고 전 씨가 과잉진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광주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표책임자는 현장 일선 지휘관이 아니라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 지휘부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명령 책임자나 양민학살·압매장,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행태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아있는 의혹은 2005년 국방부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공을 이어받았다.

과거사위는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행위 등 일부를 밝혀내는데 성과를 올렸지만, 여전히 발표 명령자와 양민학살 등에 대한 내용은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과거사위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88년 광주청문회 등 4차례 진상조사에도 미완
"어설픈 가해자 용서가 왜곡 세력 낳았다" 지적도

인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며 실명을 보고서에 명기하는 문제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내부에서 벌어졌지만 결국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선 군의 헬기 사격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며 진전된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과거 군사정권이 철저하게 기록을 왜곡해둔 탓에 5·18특조위는 "가짜외의 전쟁을 치르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헤치며 5·18의 진실은 조금씩 드러낼 수 있었지만 역사적 단죄는 흐지부지돼버렸다.

5·18을 비롯한 군사반란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씨는 구속된 지 2년 만에 사면받았고, 일부 핵심 군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가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밝혀온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이를 두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가해자에 대한 어설픈 용서가 지금의 망언과 왜곡 세력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진상규명은 처벌을 위한 것"이라며 "처벌되지 않은 세력들은 반드시 반격에 나선다. 그렇게 역사가 왜곡되는

사태가 세계 곳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씨는 2017년 5·18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발표 명령을 정당화하는 회고록을 발간했다.

5·18 왜곡에 앞장서 온 지만원 씨 역시 5·18 기록사진 속 인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발표 명령자 등 5·18의 남은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5월 단체와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김후식 5·18부상자회 회장은 12일 "여러 한계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 과거의 부메랑이 지금의 역사 왜곡과 폄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업 기자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18 자유공원 자유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혁신위원장 14명을 비롯한 회원 300여 명이 모여 현안 과제를 긴급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5.18 구속부상자회 '비상체제 전환'

현 집행부 해임안 의결, '혁신위원장 14인' 공동운영으로 가다

그동안 내부 갈등으로 내용을 겪은 '5·18 구속부상자회'가 5·18 행사를 1주일 앞두고 극적인 타격을 끝냈다.

13일 5·18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5·18 자유공원 자유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혁신위원장 14명을 비롯한 회원 300여 명이 모여 현안 과제를 긴급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임시총회 소집 사유와 경과보고 등을 통해 그동안 양회승 중앙회장의 운영체제의 문제점들과 집행부 해임결의안, 합의문 파기소송,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 기자회견 등 갈등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현 '양회승 집행부의 해임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다.

또 올 1월 19일 이사회에서 일부 회원들에 대한 부당징계한 부분을 두고 이날 재론하면서 임시총회 의장의 발의로 '징계철회 절차'를 밟고 이를 의결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비상체제로 돌입, 혁신위원장 14명이 공동 관리하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공법단체'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5·18 구속부상자회'는 전국 약 3천700명으로 이 중 1천200명은 공로자와 상의 1급~2급 회원이다. 나머지 2천500명은 부상자로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한 내용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단체로 입회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한편 '5·18 구속부상자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사업비 부당지출문제, 회계부정, 직무유기, 불투명한 수탁업무, 직원임명 등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단체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했다.

또 최근에 벌어진 극우 보수단체들의 5·18 역사 왜곡, 폄훼 집회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돌출발언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해 지역민들의 원성을 샀다.

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본 협회 혁신위원장이 광주지방보훈지청장과 면담한 결과 5월 11일 실시 하는 '임시총회'가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5·18 구속부상자회의 공법단체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 의장이 이영수 혁신위원장은 "10여 년간 갈등과 내용에 휩싸였던 5월 단체가 새로운 국면을 모색한 만큼, 5·18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재조명하고 5월 관련 단체들의 위상 재정립 등, 본연의 책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sh9668@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